

투데이 칼럼

### 북한 무력 도발의 노림수

**김**정은 정권이 새해 벽두부터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에 해안포를 쏘아 부으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앞서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하면서, 남한 영토를 경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군사적 긴장의 극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해안포 200발은 혼란이었다. 그러나 2010년 연평도 포격 약동이 있는 주민들은, 한때 긴급 대피했다.

김정은 정권은 남북한을, 동족으로서 특수 관계가 아닌, 교전 상대로 규정했다. 집권 12년 차에, 대남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천명한 것이다.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와, 군축 협상을 노리고,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말 폭탄을 쏟아내기도 한다. 서해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도 재개했다. 위협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서는 해안포 200발 가량을 발사했다. 혼란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2010년 연평도 포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북한은 위협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무력시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북한 총참모부는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



정복규  
논설위원

서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도 대응 차원에서, NLL 인근 해상으로 400발이 넘는 포사격을 했다.

강 대 강 대치와 긴장이 커지는 국면이다. 남한을 더 이상 동족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건 노동당 전 중앙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작년 말에 열린 전원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하루 일찍 나왔다.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도 상당히 길다. 핵심은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동질 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적대국, 그리고 전쟁 중인 교전 상대일 뿐이라는 것이다. 유사시 남측 영토를 경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협박했다. 김정은은 서른 살도 안 돼서 최고직에 올랐다.

이제 집권한 지, 12년이 됐다. 이제 는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한다. 급진 군사주의에 기반한 무력 통일론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과 김대중 전 대통령 간 6.15 공동선언을 사실상 전면 부정했다. 그는 한미·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 확장억제에 대한 불만, 경계심이 크다.

군부와 이른바 경제일꾼을 포함해서 내부 체제 단속도 목적이다. 중,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비핵화 대하는 포기했으니, 긴장을 극대화해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 군축 협상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가 불가능하니, 차라리 군비축소, 군비통제로 가자는 분석도 나온다. 요즘 미국은 두 개의 전쟁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한반도에 신경 쓸 여력도 없다.

북한도 이걸 잘 알고 있다. 결국

남측과는 절연하고, 핵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제 갈 길 가겠다는 것이다.

남북은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양측 간 특수 관계, 특수성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펼쳤다. 대화도 하고 교류도 했다. 6.15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선전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이제는 다 떠나서 휴전 중인 적대국일 뿐이라고 말한다.

통일전선부 등 남북 관계, 교류 협력을 다루는 기구도 폐지했다. 것처럼 외부성에 '조국통일국' 같은 것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정찰총국과 같은 대남도발, 공작 기관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서 한국의 정치권을 비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전, 현직 대통령을 비교하고 충선을 앞두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다.

김정은이 전원회의에서 남한 정권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변함 없었다고 했다. 북한은 내부 결속은 물론 대한민국 사회 분열을 꾀하고 있다.

특유의 갈라치기 전술로, 남측 사회 분열,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다.

### 사설

#### 전북자치도 키워드 개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전북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뭐가 달라지느냐 궁금증도 크다. 특별자치도법을 보면 놀랄만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기존 농경지를 해제해 산업 용지로 대거 바꿀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먼저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른바 '4대 규제' 완화를 새로운 시대의 목표로 제시했다.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배제된 땅이 강원도의 1.5배에 달한다며 개발을 내세운 것이다. 그래서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한 특별한 예외 규정, 즉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토지 이용계획에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북은 전체 4분의 1 가량이 농경지다. 이제는 농경지 밀집 지역을 통째로 '농생명지구'로 지정

할 수 있고, 땅의 용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구역'을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국내 쌀 주산지이자 전체 절반가량이 농경지인 김제시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제에서 거의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땅은 2만 1천ha가 넘는다. 여의도 면적의 무려 25배가 넘는 규모다.

김제시는 개발에 족쇄가 댄던 농지규제를 풀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포부다.

김제 다음으로 절대농지 면적이 넓은 익산시도 특별법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 북특별자치법이 허용하는 막대한 권한으로 농지에 적용되는 '대포 규제' 등을 제거할 수 있다. 13만여 ha 규모인 도내 절대농지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14개 시·군에 하달한다는 계획이다.

#### 국내 외국인 주민 226만명

외국인 주민 수가 약 226만 명에 달한다. 10명 중 6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은 국내에 거주한 지 90일을 초과한 외국인·귀화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총인구(5169만2272명)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도 4.4%로 역대 최고치다. 외국인 유학생이 전년 대비 3만2790명(20.9%) 늘어난 것이 전체 외국인 주민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형별로 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외국 국적 동포·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이 175만 2346명으로 가장 많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이 30.1%로 가장 많고 베트남(11.9%), 중국(11.7%), 태국(9.3%) 등의 순이다.

귀화자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한국계) 9만1847명(44.0%), 베트남 5만1660명(22.6%), 중국

4만1413명(18.5%), 필리핀 1만 295명(4.6%), 캄보디아 4946명(2.2%) 등의 순이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7964명(2.0%) 늘어난 40만 3139명, 결혼 이민자는 7964명(2.0%) 증가한 17만5756명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은 18만1939명으로 결혼 이민자 수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거주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가 크게 늘었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4%인 134만 68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기존의 취업 이민 중심의 이민·사회통합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양한 영역의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마약·총기류 발견 마을 수색하는 에콰도르 군경



지난 1일(현지시각) 에콰도르 투란에서 군경이 마약과 무기가 발견된 장소 인근을 합동으로 수색하고 있다.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범죄외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 트랙터로 거리 행진하는 이탈리아 농민들



지난 1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농민들이 구호를 써붙인 트랙터를 몰면서 행진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유럽 곳곳에서 유럽연합(EU)의 농업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